

SAFE WORKPLACE

ISSUE PAPER

TALK

김미영

매일노동뉴스 기자



이재명 노믹스와 이재명 세이프



● 안전은 말뿐

“사람보다 이윤’이 앞서는 사회에서 ‘안전’은 가장 먼저 무너진다. 기업의 책임 회피와 정부의 무관심 속에 노동자의 생명은 점점 가벼워지고 있다.”

지난 6월 2일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다. 대선후보로서 마지막 SNS 메시지가 잇단 중대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를 추모하면서 이윤보다 안전을 강조한 것은 상징적이다. 앞으로 5년은 대한민국이 ‘안전한 사회’로 진입할지 아니면 지금처럼 ‘산재공화국’에 머물지를 결정할 것이다. 대선 기간에도 매일같이 노동자들은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 5월 19일 SPC 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회전 중인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투표 하루 전날이던 6월 2일에는 태안화력발전소 기계공작실에서 ‘나 홀로 작업’을 하던 노동자 김충현 씨가 기계에 끼어 사망했다. SPC와 태안 화력발전소 모두 과거에 노동자의 몸이 기계에 빨려 들어가 시신조차 온전하지 못한, 그야말로 끔찍한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사업장이다. 사업장의 대표가 국민 앞에 머리를 숙였고, 재발 방지를 거듭 약속했던 곳이다.

이들 사업장뿐만 아니다. 안전보건공단 사망사고 속보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이던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일하다가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모두 18명에 이른다. 대선주자들이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외치는 순간에도 일터는 너무나 쉽게 노동자들의 생명을 앗아갔다.

● 이재명 대통령 취임사 “안전이 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안전이 밥”이라며 안전사회 건설을 약속했다. 특히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 피해를 입는 일은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안전보건 공약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으로 집약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두 가지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되는 적용대상의 확대와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으로 설명하는 안전보건 행정체계의 변화다. 더 자세히 뜯어보자.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정책공약집을 통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을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체계’로 개편하고 정부의 노동안전보건체계를 통합운영하겠다고 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 보호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9년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적용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제공자’로 확대했다.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부르는 당시 법 개정으로 적용대상이 노무제공자로 확대됐지만 실제로 법의 보호를 받는 노무제공자는 매우 제한적이다. 170여 개에 달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조항 가운데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에 적용되는 조항은 77조와 78조 2개 조항뿐이다. 그것도 보험설계사 등 산재보험법 적용을 받는 14개 직종만 가능하다.

이재명 정부는 ‘노무제공자’를 ‘모든 일하는 사람’으로 넓히겠다고 공약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일하다 위협에 처해도 아무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름뿐인 사장님’들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체계로 끌어들이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도 자동으로 넓어진다.**

두 번째로 안전보건 행정체계가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내 흩어져 있는 노동안전보건 업무를 하나로

‘사람보다 이윤’이 앞서서
사회에서 ‘안전’은 가장 먼저
무너진다. 기업의 책임 회피와
정부의 무관심 속에
노동자의 생명은 점점
가벼워지고 있다.

모으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때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추진했다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을 본부로 격상시켰는데, 이재명 정부는 재난과 안전을 다루는 정부 부처와 기관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통합·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카드도 꺼냈다. 기업들이 매년 안전보건 관리 현황, 투자 규모, 사고 발생 현황 등을 스스로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야간근무자들의 과로사를 막고,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도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노동안전보건 정책의 방향은 틀리지 않았다. 문제는 속도다. 경기침체와 저성장 기조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1호 행정명령은 ‘비상경제 점검 TF 구성’이었다. 자칫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일터에서 또 누군가의 목숨이 가벼워지는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성장과 분배, 기업 발전과 노동 존중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 이재명 노믹스와 이재명 세이프가 어떻게 믹스될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처럼 노동자의 생명보다 무거운 것은 없다. 🍷